

공안부 우환 제거와 극단사건 발생 방지 포치

공안부는 13일 회의를 소집, 책임담당을 강화하고 모순분쟁 조사와 해소를 심화하며 위험 원천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두드러진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사회안정을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광둥 주해시 향주구체육센터에서 차량 돌진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사상을 초래했는데 그 성질이 극히 악랄하다.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건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고정하며 법에 따라 살인범을 엄벌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부상자 구급치료와 사후 처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교훈을 깊이있게 섭취하고 한가지 일로부터 류추하여 위험부담 원천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며 새시대 "풍고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예방 우선시, 조정 우선시, 법적 운용, 현지 해결을 견지하고 혼인가정, 이웃간 분쟁, 법과 소송 관련 등 각종 모순과 분쟁을 깊이있고도 세밀

하게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중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최대한 모순과 문제를 기층에서 해소하고 원천에서 처리하며 동태적으로 숨겨진 우환을 제거하여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상황지시행동(情指行)' 일체화 운영기제에 의거해 사회면의 전반적인 예방통제를 한층 더 엄밀하게 하고 대중밀집 장소 등 중점지역에 대한 순찰통제를 강화하며 경찰 감시, 단속물과 억제력,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절강성의 '홍풍의경', 북경시의 '요양군중' 등 좋은 경험과 방법을 총화, 보급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 전문사업과 군중로선을 결합한 새로운 구상과 조치를 모색하고 군중업무 기제와 조치를 보완하고 발동하며 대중예방과 대중단속 역량을 발전시키고 강화하여 공안업무의 '금성철벽'을 구축해야 한다.

/ 신화사

최고법원 :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기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죄인 판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판모는 교원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는 소학교의 여러 여학생을 100여차례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상모는 농촌 결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문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범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에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크며 죄행이 극히 엄중하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농촌 결혼가정 아동과 지적 발육 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등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바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 기구에서도 발생한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 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진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 신화사

사례로 법 말하기-10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가?

사례	법률해석
2017년 1월, 소명은 왕씨로부터 3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2018년 1월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차용 기한이 만료된 후 왕씨가 소명에게 돈을 갚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소명은 끝까지 갚지 않았다. 2020년 6월, 왕씨는 재차 소명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소명은 계속 갚지 않으면서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기소해도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소명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가?	소명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비록 민법전 제 188조의 규정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 기간은 3년이지만 채권자가 소송 시효 기간에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며 3년이란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 시효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유기지의 법률도우미]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 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 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뿐만 아니라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 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약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

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 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서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서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 감정 파열을 이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정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연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 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정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 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었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

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299 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중국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 신청을 했다. 수하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정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 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중국에서도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

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 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 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 12 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 판결은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이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 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 유경봉기자

가짜 '체포령' 뒤에 숨겨진 터무니없는 속임수

최근 장춘신구에서 정법기관의 사업일군이라고 사칭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루게 손실이 375만 9,000원에 달하는 특대 전신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장춘신구공안분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러 부문의 합동작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손실 60만원을 만회하는 데 성공했으며 18명의 범죄의자를 전부 나포했다.

피해자 류씨 녀성의 기억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QQ를 통해 위조된 '체포령'을 보내왔고 그가 중대한 범죄활동에 연루되었다면서 류씨에게 수사 협조 요청과 함께 개인재산을 이른바 '안전계좌'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꾼들의 치밀한 화술 공세에 류씨는 한동안 판단력을 잃고 여러차례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

했다. 속아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 후 류씨는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후 장춘신구공안분국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속히 전담반을 설립하고 사건 관련 계좌에 대해 긴급 지불정지와 동결 조치를 실시했다. 정보와 자금 흐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전담반의 성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경내에 위치한 전신사기 범죄조직을 확정하고 소탕하여 류씨에게 부분적인 손실을 만회해주었다.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신형 범죄에 대한 장춘신구 경찰의 효과적인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대중들에게 자아보호 의식을 일층 강화하고 각종 전신사기

행위에 경각심을 높일 데 대해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관은 절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며 이른바 '안전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찰 제시 -

경찰은 전화, 문자, 위챗, QQ 등 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민약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관의 사업일군이라고 자칭하는 경우는 반드시 진정하고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에 상세한 신분 정보를 요구하고 정구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관은 대중들에게 자금을 지정 계좌에 넘길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은행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이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민감한 정보(은행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를 요구하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광범한 대중들은 범행 의식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낯선 사람의 전화, 문자 혹은 인터넷 정보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발표한 사기 초기 경보와 사례 통보에 관심을 돌리고 최신 사기 수법과 특징을 잘 리해함으로써 사기행위를 더 잘 식별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건기자

훈춘시인민법원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개정 심리

◆ 당신이 구매한 상품은 정품 일가?

전자상거래산업이 번영발전하고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가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단이 더욱 은밀해지고 가짜저질 제품을 타격하는 형세도 더욱 준엄해지고 있다.

10월 28일, 길림성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을 공개심리하고 이중계정을 통해 전 과정을 생방송함으로써 사례로 법을 해석하는 법률보급교육을 강화했다. 이번 법정 재판 생중계는 도합 2시간이었는데 근 80만명의 네티즌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료해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10월 '모 미국' 등록상표를 양도받고 부동한 서비스 류형에 등록상표를 신청하여 자체의 '모 미국'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부대적인 인공인마씨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 2022년 8월, 피고는 여러 플랫폼에 개설된 점포에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포장, 도안, 문자, 로고가 완전히 일치한 저렴한 상품을 진렬하였고 판매가격도 저렴했다. 해당 상품은 점포 초기 화면 맨우에 진렬되어있었고 판매량은 129건, 거래액은 약 3만여원에 달했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의 대리변호사가 각자 의견을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휴정을 선포하였고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특정한 상품 또는 봉사에서 원천 구분 목적으로 특정한 표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다. 상표권의 취득 방식에는 사용을 통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과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

을 취득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등록을 통하여 얻은 상표권을 등록상표 전용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상표등록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기본적 방법이다. <상표법> 제 3 조는 "상표국의 등록을 비준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고 상표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가지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 상표란 무엇인가?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표지이다. 자

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모든 표지로 문자, 도형, 글자, 숫자, 3차원 표지, 색상 조합과 소리 그리고 상기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한 것들은 전부 상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을 수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근년대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부단한 향상에 따라 상표권 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마땅히 공식적인 경로와 수권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서적 등의 모조품(仿冒), 위조품(假冒), 해적품(盜版產品)의 구매와 사용을 피하고 정품 인증 또는 공인된 인증서가 있는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저작자와 기업이 보다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 리전기자 / 사진 훈춘시인민법원